

2021년 전반기 비상논술 최종정리

조성욱 박사

2021.6.5

문) 출제경향 분석

■ 논술시험 출제 방향 변화

- 기본문제유형
 - 제1문 : 국가위기관리 및 비상대비체제 (15점)
 - 제2문 : 동북아 안보정세 (10점)

↓

- 최근 각종 국가위기관리와 연계하여 문제구성
- 제1문(15점) : 국가위기관리/비상대비태세
 - ① 북한관련 안보위기에서 17년 하반기부터 재난위기로 변화
 - ② 4차 산업혁명시대 위기, 기후/환경변화 위기 등으로 확대
- 제2문(10점) : 동북아 안보정세 등 → 사이버, 재난 위기관리
 - ① 현정부의 안보정책(18 상·하반기) : 군사안보, 외교안보,
 - ② 위기관리, 테러(19'상), 사이버안보(19'하), 재난, 통신(20'상)

↓

■ 2020년 시험출제 내용 및 향후 출제 경향

- 2020년 출제내용
 - 전반기 : 보건안보, 평가기준, 레짐, 재난통신전략, 소셜미디어
 - 하반기 : 안보딜레마, 사이버안보와 미중기술패권경쟁, 지진발생시 대응 등
- 향후 출제경향
 - 제1문(10점 또는 15점) : 안보위기(북한, 국내, 국제) + 국제정치관련 내용
 - 제2문(15점 또는 10점) : 재난위기(자연재난, 사회재난) + 국제정치관련 내용

국가 위기의 종류



○ 2020년 상반기

국가위기 및 비상대비체제

1.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능력 평가와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계점

가. 글로벌 보건안보 관점에서 코로나 19 같은 감염병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기술(5점)

나. 일반적인 보건레짐과 구별되는 감염병 레짐의 성격을 설명하고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과정에서 발병국의 국가위상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계를 설명(5점)

2. 상시적 재난관리를 위한 정보통신 전략 수립 요건

가. 상시적 재난관리를 위한 정보통신 전략중 재난통신 전략수립에 필요한 요건 기술(5점)

나. 소셜 미디어의 장단점과 정부차원의 개선책을 기술(5점)

다. 사회적 재난이 확대되어 국가적 재난 또는 국제적 재난으로 전개된 사례를 제시하고 국가간 극복을 위한 대안 기술(5점)

○ 2020년 하반기

국가위기 및 비상대비체제

1. 사이버안보와 네트워크 보안대책과 연계한 미중간 네트워크 기술패권경쟁

가. 안보딜레마 개념 및 중국 사이버 안보 강화가 미중간 사이버 안보 딜레마로 연결되는지 설명(7점)

나. 사이버안보와 네트워크 보안 설명(3점)

다. 미중간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과 우리의 대응방안(5점)

2. 동남부 대지진 발생시 대응방안과 이재민 발생시 이재민 구호활동과 민간협력 구호체계

가. 재난관리 4단계에 근거한 각 단계별 대응방안 기술(5점)

나. 민간 및 정부차원에서 이재민 구호활동과 민간협력 구호체계에 대해 각각 기술(5점)

제1문) 코로나 전감염병 대응능력 평가와 국제사회의 대응과 현재상황 분석

④코노노 130 인하여 전쟁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한족은 ⑤한민족의 성공으로 인하여 제해권인 주권을 잃고 있다. ⑥한민족 국책적인 차원의 보타 리와 국책적인 배타나를 구축을 통한 상호이익과 철교로된 주권 등으로 주축적인 제해 권을 수립하고 있다. ⑦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제해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시킬 필요 가 있다. ⑧본조에서는 코노노 130 같은 일련의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기준과 일련의 제권의 성격과 말발국의 국가수호에 따른 국책사회의 대응능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글로벌 보건인보기구는 감염병 및 생물대리의 대응을 위한 국가간의 상호협력 및 자원체제를 말하며, 감염병 대응능력의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교육·문화·체육부

1. 기업별 해결의 성격

기업별 해결은 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차원의 보건권리와 국제법적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건권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적체제로서 선결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국가를 중심으로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재학회사 등과 관련관료조직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국내 포괄적인 코드나실과 국제법적체제를 신속하게 구축하여 기업별 발생시 조기에 즉시 대응함으로써 기업들 조기에 치유할 수 있다.

둘째, 동종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실시간 대정보통시스템 구축하여 오염물질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조치나 신속하게 실시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긴밀한 국가와 의회나 학계와의 구축하여 조기에 유해물질 입출을 차단하고, 유독 물질나 마스크 등 방역물자에 대해 삼각지검출을 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첫째, 어떠한 자치체와 시민사회의 의제 설정과 확대 등으로 글로벌 사회화라는 따른 공동연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국제적인 공감대가 국가내부는 제한된 자원으로 집중해야 하는 데 대한 지리와 치료를 혁신하는 원동기이다.

둘째, 감염병 정보공유와 병원데이터를 공유 설 정보교류체계 마련에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이미 도시전체를 폐쇄하는 상황을 조처하였으므로, 향후 조처하지 못할 때에 대해 전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원지국가 사망자가 급증하였다.

셋째, 중국이 코호트 관리시스템을 모든 각국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중국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조기 감시정지를 실시하지 않아 피해가 증가 되었다. WHO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국제협력도 중요 도식적응책 필요하다.

넷째, 국가별 의료방역 수준과 역량을 강화할 지라도 선진국형에서 후발국형까지 국가별 맞춤형 바이러스 연구센터나 사회적 건강위기를 대응 할수 있는 전문인이 부족하다. 국가별이며 마스크 제조업이나 의약품 제조 등 제조업 적용하기 어렵다.

④ 신을 칼럼니스트로 2012년 신숙재에 **국책원로특별위원**을 승격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국악비**가 신숙재칼럼 발행시 국가정보로 즉시 통행할 수 있는 합법기관과 전문조직이 구성되어
 되고 신보전보재와 국책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⑥ **국악비**가 원초에
 각종 제반관리 국책원로특별위원을 구축하여 상시적 제반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⑦ 국악적인 제반시스템특별위원을 신숙재 정무의 지지층은 물론 비상대응관리자까지 각자
 책임을 지고 소모할 것인가? 고지수는 물론 면담이 필요하다. 끝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Government of India

각종 사회적 재난발생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상시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상황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재난 발생시 우왕좌왕함으로써 피해를 확산시키고 허위정보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상시적 재난관리를 위한 정보통신 전력 수립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통신전략 수립과 소셜미디어의 장단점 및 국가간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한다.

상시적 재난관리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재난정보 및 통신 전략 수립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소 민간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및 안전활동 및 안전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재난관련 정보통신분야의 법, 제도, 가구, 조직 등의 위기요인을 실질적으로 검토보완 하는 등 상시적 재난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측면에 대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측면에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실효성을 제고하여 현실에 부합되는 종합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

가상관측이나 재난예측 및 정보시스템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추진하고, 관련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대비계획, 준비, 교육훈련과 대응매뉴얼을 준비한다. 또한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제도, 예산, 업무수행체계, 자판관리, 교육훈련 및 정보체계까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재난대응단계는 수색과 구조, 대피소운영, 의료서비스 지원 등의 일련의 활동을 유관 기관이나 민간단체 간 공조체제를 통한 효율적인 긴급구조대세를 확립하고, 재난사태 선포시 민간차원의 응원을 요청하고 대피방법 등 재난시스템을 체계화 하여야한다.

신속한 복구의사 결정과 개원중심 복구도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강구하고, 과학적인 피해 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복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신속하게 재난합동 조사단을 구성운영, 피해배상(고상), 자원봉사단활동, 항구적 복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피해조사, 재난복구 비용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단계이다.

A은행합격

역대 논술에서 학원기출이 그대로 나온 적은 없다고 합니다. 수강생들로 하여금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병설타 치거나, 삼진 아웃되지 않도록 변화구에 금방 적응시켜 출루시키는 것이 교수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강의자료, 참고자료를 활용해서 자신의 답안을 정부시책에 방향성을 두고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수강생들의 몫입니다. 수강생들에게 변화구를 배트길게 잡고 한방에 홈런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논지를 쫓아 공을 배트 중심에 맞추고 힘 달는 한 길게 밀어치라고 강조해주세요용 🍌

● 시험문제 안에서 답을 찾는 요령이 절대적으로 필요

- 제시문내용의 일부를 서론에 기술
- 소주제의 질문내용 순서대로 반드시 기술

Ⅲ. 소셜 미디어의 장단점과 정부차원의 개선책
소셜 미디어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과 같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1. 소셜 미디어의 장점
첫째, 산발과 같은 사회적제난 발생시 신속한 정보전파로 상해를 최소화함으로서 SNS를 이용, 재난지역에 민간기관과 지자체 등의 인력과 정보의 초기투입이 가능하다.
둘째, 긴급대피나 안내, 구호, 구급 등 필수 재난구호적인 수혜시 SNS를 통해 경주 중간배제제를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서 초기대응에 유리하다.
2. 소셜 미디어의 단점
첫째, 음언미 및 정보의 질적 저하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정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허위정보 및 경주 긴급구호 인력과 물자등을 학기학소에 배치할 시기를 놓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추궁할 방법이 없다.
둘째, 다양한 소셜네트워크로 교류하다보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 노출되어 개인정보 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과 연계된 금융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정부차원의 개선책
첫째, 국가재난통신망 실시간 물품 및 민간차원의 협력
재난 발생 시 응급 대응을 위해 재난지역에 보급되고 상용화되는 국가재난 통신망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 운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차원의 통신망도 활용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할 경우 재난발생시 초기대응이 가능하다.
둘째,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 및 민간차원의 정보의 신뢰성의 확보
재난 현장정보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자발적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민간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중앙통제기관에서 실시간 분석하여 정확한 정보를 현장에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재난사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다양한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운용
재난현장에서 각업무처의 다양한 통신 인프라를 필요에 구축하여 재난상황시 신속하게 인원과 정보를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 통신망에 추가하여 민간부문의 3G 통신망을 포괄적으로 구축시 체계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Ⅳ. 사회적 재난이 국가재난으로 전제된 사례와 위기 극복 방안
현재시대는 글로벌화되고 정치경제적으로 융기적으로 연결되어 재난 발생시 국제적 재난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재난 국가적 재난으로 전제된 사례
첫째, 우크라이나 1994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국제적 원전피해 대응 당시 누출된 방사능물질은 히로시마 원전의 400배로 소용량들은 방사능 누출도 모론해 무방비로 투입되어 사망하고, 30km 떨어진 체르노빌시는 유원도시로 전락되었고, 주변에 있는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와 유럽 곳곳의 많은 국가들을 오염시켰다.
둘째, 일본의 2011년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력 발전소사고
태지진과 쓰나미로 원자로 폭발로 방사능이 누출되어 국가적 재난에 이어 핵발전으로 인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의 관련 한국주의 WTO분쟁건이 대표적 사례이다
셋째, 아프리카 태지진으로 유럽과 아프리카에 전세계적으로 확산
아프리카태지진(ASF)은 1921년 케냐에서 처음 발견되어 1977년 국경을 넘어 유럽으로 유입되어 1980년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구역을 종남미까지 확산되었다.
2. 국가적 위기극복 방안
국가재난 관리체제의 바람직한 구조형성의 4가지 핵심요건인 통합성, 유기성, 협력성, 학습성이 선순환되어 상호작용한다면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통합성 측면에 보면, 국가에서 발행한 재난이적인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재난에 대한 대응요령 전파와 자속자원 등에 대해 각종 SNS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지원 요청하는 등의 초기가적인 정보와 상호지원체제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유기성 측면에서 보면 모든 재난은 상호연관성이 있어서 위기극복과정에서 분리해서 대응할 수가 없다. 자연재난이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되고, 피해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기 때문에 최소 복잡재난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협력성 측면에서 감발발같은 경우는 핵전쟁은 치료제연구와 개발비용은 천문학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가별로 공동연구하고 실험하는 등의 국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넷째, 학습성 측면에서 태풍과 바이리나, 산스, 아프리카 태지진 등을 통하여 학습된 노력을 국가별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대응할 경우 훨씬 효율적이다.
Ⅴ. 결론
각종재난 발생시 상시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온국민이 걸출한 힘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상시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통신전송수입과 더불어 소셜미디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대피하는 등의 초기대응능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초기가적인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최소 정부나 지자체는 물론 민간차원까지 총동원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다. 끝.

2021년도 전반기 출제 경향분석

■ 국가안보 및 국제정치 분야

1.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책.
2. 국익, 가치, 동맹의 미래와 관련된 주제.
16'하) 1)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한미동맹 변화가능성과 우리정부의 외교전략을 제시하시오(5점)
2)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예상되는 미중 갈등양상과 우리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5점)
3. 미중패권경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비방향
4. 미중기술패권 쟁점분야의 종류를 기술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은 ?
- 종류 : 5G, 반도체, AI, 양자컴퓨터 등
5. 한미동맹 갈등사항 또는 저작권관련 우리정부의 바람직한 대응방향.
6. 테러 및 사이버테러 문제
- 일반테러 : 최근 아프간,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 증가
- 사이버테러 : 언택트시대 사이버 공격 양상과 대응방향
7. 한반도 주변 해양영토 갈등에 대한 대비방향
2021.6.1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는 등 갈등양상 초래
8. 최근 동북아 안보상황을 고려한 우리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9.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이슈를 직시하고 대응방향에 대해
정치적(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기술하시오.
10. 북한위협 대비 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 발전
11. 북한 핵무력 증강에 따른 우리의 국가안보전략 변화
- 핵개발억지전략, 비핵화전략, 한국식 핵보유전략(나토식, 전술핵)
- 북한의 핵공격을 전제로 한 비상대비태세 발전

■ 재난대비 및 위기관리 분야

1. 포괄적 재난대응 및 위기관리 절차(반복출제: 3회)
- 재난대응 4단계 적용 및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 위기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대응위한 위기관리 절차
- 대규모 복합재난대응(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연계)
- 예측과 대비곤란, 대형화, 초고속화, 초국가적 대응 등
2. 글로벌 신안보위협에 대한 협력방안
-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대응 : 사이버/국제테러, 기후변화, 보건안보, 5G 등
- 예방적 측면에서의 맞춤형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 : 주민, 민간기업, NGO, 공공기관 등
3.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이재은, 315-329)
- 위기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대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문) 논술 작성시 기본틀

안보위기	재난위기
○외교안보적- 경제적-군사적 측면 ○현실주의-자유주의(신자유주의)-구성주의 ○정치- 경제 - 사회문화적 측면 ○국가위기관리체계의 구성요소 예방-대비- 대응-복구 * 2019년도(하)시험문제 : 대량난민사항설명	○구조- 운용 - 효과성측면 ○재난관리활동단계 예방- 대비 - 대응 -복구 ○훈련준비- 훈련 실시-훈련 평가 ○목표- 수단 - 방법 ○법과제도 - 조직 - 자원관리 - 연습 및 훈련 - 전문인력 ○법령- 조직-업무수행-자원관리 - 교육훈련-정보화체계 ○소통- 입법 - 재원확보 - TF -경과조치 - 상벌교육 ○단기적/시급성대책- 실질적/장기적 대책 ○재난관리체계의바람직한 구조 통합성-유기성-협력성-학습성 ○재난관리원칙 사전대비-현장중심-지휘통솔-정보공유-상호협력원칙

문) 논술문 작성요령(최종정리)

1. 본인이 예상했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경우는 거의 없다.
- 순간 당황, 논문작성요령과 출제 가능성 있는 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이 잘되어 있으면 전혀문제없음.
2. 모든 시험문제 출제관은 **기출문제를** 보면서 현상황에 가장
적합한 문제를 출제하려고 고민할 것이다.
3. 비슷한 문제가 출제될경우에도 그 동안 기출문제나 학원에서
작성하여 배포된 연습문제에 **자기만의 창의적인 생각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한다. (예, 학원별 답안지 형태가 비슷)
4. 출제 교수가 채점 시 일단 논술답안지를 A B C D로 분류한다.
- 서론, 결론, 본론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가?
- 본론에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주장(키워드)**가 들어가 있는가?
- 글씨에 **정성**이 있고 5 **페이지** 작성되어 있는가?
5. **비상계획관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비.
6. 법령자체를 논술문제로 만들어 출제할 경우에도 대비 필요.
7. **배점고려한 지면할당**(제1문에 시간과 지면할당 과다, 2문작성 시간부족)
8. 본론에서 질문별 주장은 몇개가 좋을까(5점기준 기본 2개이상, 최대 3개)
9. 문제점과 대책중심으로 작성시 **대책(대응방안)**을 더 충실하게 작성

문) 인간안보(人間安保)

1. 인간안보의 개념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정의되었으며, 무력으로써 **국토를 지킨다**는 전통적 안보개념을 넘어서,
발전(發展)으로서 **인간을 지킨다**는 새로운 안보개념을 제시함.
즉, 기존의 국가안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군사적 위협은 물론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대상을 인간으로 설정하는 비전통적안보
개념이다.

가. 인간안보란

- 탈냉전이후 부각된 내전, 기아, 빈곤, 질병, 억압과 같은 고질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
- 가정, 직장, 사회에서의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겪게 되는
고통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

나. 범주 : 경제안보, 식량안보, 건강안보, 환경안보, 개인안보, 공동체안보, 정치안보, 사이버안보 등.

* 개인안보: 고문, 전쟁, 탄압, 범죄, 젠더폭력, 아동학대 등

2. 등장배경

- 탈냉전기 국가간 전쟁은 감소추세, 내란·인종분쟁 등으로 시민들의 희생 빈발.
- 세계화의 역기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빈곤, 기아, 질병의 고통.
- 세계화의 진전은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전 지구촌의 문제로
사고의 범위 확장.

3. 인간안보의 특징

- 보편성 :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나 보편적인 문제.
- 상호의존성 : 인간안보의 모든요소들은 전세계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 유지.
- 예방 : 사후적 대책보다 사전적 예방이 더 효과적임.
- 인간중심적 : 인간안보는 '사회속에 숨쉬고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

4. 위협요인

- 정치적 차원 : 권위주의, 독재적 정치체제
- 경제적 차원 : 경제위기, 실업, 빈곤의 심화
- 사회적 차원 : 초국가적 범죄행위의 증가, 사회적 혼란, 불법인구 이동, 테러
- 환경적 차원 : 환경악화, 자원부족, 초국경적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등
- **군사적 차원 : 대인지뢰,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5. 대응방안

① 개별국가 대응

- 정치체제나 경제체제 개혁, 실업자 구제 등을 자체적으로 대응
- 그러나 초국가적 위협 대응에는 한계

② 국제거버넌스 방식

- 관련국가들이 국제기구를 창설하거나 국제조약을 체결하여 대응.
- 포괄적 안보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할수 있는 수단
- 그러나 국가간 협력자체가 어려운 과제, 유지가 어렵고, 국가가 이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협력에 한계

③ 글로벌 거버넌스 방식

- 글로벌 거버넌스는 인간안보 달성을 위해 관련된 모든 국제정치의 행위자들이 신뢰에 기초하여 협력하는 문제해결 기제를 말한다.
- **미국가행위자**들이 참여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
- 그러나 주권국가들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글로벌 거버넌스 방식 자체가 도입되기 어렵다는 한계.

문) 인간안보관련 주요 관심사항

1) 2020.5.10. 문재인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이하여 인간안보로서 한반도를 둘러싼 내외의 도전을 풀어보자는 제안, 오늘날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인간 안보로 확장돼 모든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함.

2) 인간안보에 의한 남북협력사례

- 코로나 19, 말라리아,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공동방역
- 코로나 19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고 지적 (2020.4월27일 판문점 선언 두돌시)
- 가축전염병과 접경지역 재해재난, 기후환경변화에 공동대응하는 등 생명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
- 인간안보측면에서 환경, 보건, 재난극복을 통해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공동체를 지향하자는 메시지임.

예상문제)

인간안보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동안 남북한 간의 인간안보측면에서 협력한 사례를 적시하고 향후 인간안보측면에서 추가로 발전시킬 사안에 대해 설명하세요.

문) 국제정치 주요용어 정리

1. 안보 딜레마

한 국가가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면 주변국이 위협을 느끼고 군사력을 증가하거나 도발하는 기회가 되어 거꾸로 안보에 해가 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달성하고, 남북이 군사적 신뢰를 쌓아 군비통제를 한다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다.

기출 20'하)

안보딜레마 개념 및 중국의 사이버안보강화가 미중간 사이버안보딜레마로 연결되는지 설명하세요.

2. 동맹 딜레마

동맹안보 딜레마는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딜레마로서 '동맹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나라가 처하게 되는 안보상의 딜레마'를 가리킨다. 곧, 소위 방기(放棄)와 연루(連累)라는 상반된 리스크에 봉착하여 한 쪽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 **방기의 위험**이란 동맹을 맺지않으면 동맹국의 도움이 절실할 때 방치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며 **연루의 위험**이란 동맹국을 지원하여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한계 및 그러한 동전의 양면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동맹의 딜레마

① 후견-피후견관계(예, 로마시대, 냉전시대 한미동맹관계: 6.25전쟁 직후)

② 안보지원과 자율성 교환의 딜레마(예, 한미동맹과 같은 비대칭동맹에 적용되는 이론)

③ 방기-연루의 딜레마

동맹은 회원국 각자의 안보이익, 동맹에 대한 의존성 정도, 동맹에 대한 안보 공약의 정도에 따라 기회비용 편차가 발생하며 기회비용의 편차에 따라 방기와 연루의 동맹 딜레마 발생

* 한편 이러한 동맹안보 딜레마는 인간이 선택의 기로에서 최선의 선택을 통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이기적인 차선책을 선택하게되는 경우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상문제) 동맹안보 딜레마의 개념을 설명하고 현재 미국이 삼성전자 등 미국본토의 반도체투자요구와 직간접적으로 쿼드(QUAD)에 한국의 가입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가 미중간의 동맹딜레마로 연결되는지 설명하세요.

- 상황설명(반도체 등 기술패권, 쿼드 플러스)
- 방기시 문제점/대책
- 연루시 문제점/대책

참고) 미중대립과 갈등사안에서 '사안별지지(issue based support)'와 외교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원칙기반외교'를 추구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쿼드(QUAD)에 일괄가입 하는것보다 쿼드(QUAD)에서 미국과 중국이 상호협력하고 있는 코로나 19 방역과 같은 **글로벌이슈 등에 대하여 사안별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쪽으로 협조**하면서 중국의 거부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점진적 가입하는 방안 모색 필요.

- 5.21 한미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 유의 필요, 또한, 쿼드 역시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다자주의 원칙**과 함께 진행.

3. 중국제조 2025'(교재 129~130)

관세에서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이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장되면서 패권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미중간 패권전쟁은 사실상 **기술패권**이라 할수 있으며, 이를 촉발한 것은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전략은 **반도체, 전기자동차, 로봇, 해양프랜트**,

바이오, 항공 우주장비 등 10대 핵심사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 하이테크 국가로 전환시켜 중국이 궁극적으로 현재 실질적인 기술패권 국가인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뿌리치기 위해 **중국의 성장을 둔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제조 2025의 구체적인 내용은 **차세대 첨단산업 고도화 전략**으로, 중국 제조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3단계 목표와 9대 과제, 10대 전략산업 육성, 5대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

- ▶ 1단계 (2015~2025):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등과 같은 글로벌 제조 강국 대열에 진입, **핵심소재부품 70%자급자족**, 글로벌제조강국 대열
- ▶ 2단계 (2026~2035): 해양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제조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조 강국으로 부상**.
- ▶ 3단계 (2036~2045): 주요 산업에서 선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미국을 추월, 세계 시장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1등 국가**가 됨.

4. 탈동조화(디커플링:Decoupling)

국가와 국가, 또는 한 국가와 세계의 경기 등이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고 탈동조화되는 현상. 동조화(coupling)의 반대 개념이다. 한 나라 또는 일정 국가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보편적인 세계경제의 흐름과는 달리 **독자적인 경제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크게는 국가경제 전체에서, 작게는 주가나 금리 등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일부 요소에서 나타나기도 함.

예)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디커플링 될 경우 항공산업이 연간 380억~510억달러 **매출손실** 발생하며, 이는 16만7천 ~22만5천개 **일자리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한 반중(反中) 경제블록.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들 만의 산업공급망**이다. 코로나 19 확산과 미중 패권전쟁 등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겪는 와중에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경제네트워크를 구상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등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6. 클린네트워크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중국공산당 같은 악의적 행위자들의 공격적 침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인 접근법으로서 2020년 4월 29일 발표하였다.
美 ‘클린 네트워크’ 5개 수단 동원, 중국판 ‘카톡’ 퇴치전을 펼치고자
클린 캐리어(Clean Carrier), 클린 스토어(Clean Store), 클린 앱(Clean
Apps), 클린 클라우드(Clean Cloud), 클린 케이블(Clean Cable) 등 5가지
방식 동원했다.

* 미국의 중국 IT탈동조화 : 틱톡, 위챗 등 중국 앱 미국내 사용금지(2020.8)

★ 7. 동북아 안보상황 고려한 안보전략

상황: 미중패권경쟁, 자국주도 해양질서, 군비경쟁, 비핵화 협상 교착,
북한의 핵무력 증강 및 미사일 도발, 한일위안부 배상판결 등

가. 현실주의 :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이익과 가치를 힘(Power)을 통해
확보할수 있다는 이론

- * 능력증대/자주국방, 동맹, 세력균형/ 안보딜레마, 국방딜레마 발생
- ① 첨단전력 증강을 통한 자주국방 구현
- ② 한미동맹 발전 / 한미동맹 활용 북한 비핵화 달성

나. 자유주의 :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이익과 가치를 상호협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이론

- * 상대방위협 줄이기/집단안보, 군비통제, 통합
- ① 대북관계 개선 및 한국 주도의 평화통일여건 조성
- ② 동북아 주변국과 우호협력 증진 통한 한반도

다. 신자유주의 : 협력으로 위협감소, 적절한 군사력유지로 취약성도 감소

- * 다자안보, 국제평화 유지활동, 분쟁지역 파병, 국제기구 참여, 빈곤국
원조, 초국가적 위협 공동대처

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발전

⑥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유리한 국제질서 조성

라. 구성주의 : 정체성 조화를 통해서도 국가이익을 확보할수 있다는 이론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

- * 역사사회갈등 해소로 공감대 형성네트워크 강화
- * 문화적 기반확대로 문화공유, 친밀감 증대
- ⑦ 역사와 안보문제 분리, 역사분야 공동연구
- ⑧ 주변국가와 문화활동, 교류활성화

8. 죄수의 딜레마

협동을 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배반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일례로 두 공범자 A, B가 함께 범죄 사실을 숨기면 둘 다 형량이 낮아질 수
있는데도,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수사관에게 알려주면 자신의 형량이
감경된다는 말에 혹해서 상대방의 범죄를 폭로함으로써 결국 둘 다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두 죄수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을 했다가 공멸하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다

9. 치킨게임

어떤 사안에 대해 대립하는 두 집단이 있을 때 한쪽이 그 사안을 포기하면
상대방에 비해 손해를 보게 되지만, 양쪽 모두 포기하지 않는 경우 가장
나쁜 결과가 벌어지는 게임이다. 일종의 겁쟁이 게임으로서, 누구든지 먼저
포기하면 겁쟁이(chicken)가 되지만, 양쪽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게임이다.

이 용어는 가상의 사고 게임에서 비롯되었는데, 두 사람이 각각 자동차를
타고 서로에게 돌진한다. 이때 누군가가 핸들을 돌려 피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죽게 되지만, 누군가가 피한다면 먼저 피하는 사람이
겁쟁이(chicken)가 되어 결국 게임에서 지게 된다. 이 용어는 냉전 시절
(1950년대 ~ 1980년대)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 간의 군비 경쟁을 빚대는
데에 사용되기도 했다.

10. 세력균형이론(Balance of Power)

국가 간에 힘의 분포가 균등한 상태 또는 그것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정책이며, 이러한 세력균형은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출발, 현실주의적 가정을 공유한다. 즉,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자국의 생존 확보를 위해 내부적으로 경제력과 군사력 향상, 외부적으로 동맹 강화 또는 상대방 동맹 약화 활동, 이러한 내외부적 노력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세력균형체제가 형성된다.

-세력균형 형성방법 : 분할과 지배, 보상, 군비증강과 군축, 동맹, 완충국가 등

11. 세력전이이론

사회 일반국가 간 성장 속도의 차이 때문에 도전국의 국력이 패권국의 국력보다 강해지는 현상에 관한 이론임.

현재 미중간의 패권전쟁이 발생하고 있는것에대한 대표적 이론으로서 연구에 의하면 공격적 현실주의이론, 패권안정이론, 세력 전이이론은 미중간 전쟁은 필연적 과정으로 주장하는 반면 방어적 현실주의이론, 신자유주의이론, 구성주의 이론 등은 전쟁회피와 현상유지 가능성을 강조
* 투키디데스 함정 : 기존패권국가(스파르타)와 신흥강대국(아테네)간의 충돌상황을 의미, 최근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사용.

12. 연성권력

•연성 권력(軟性權力) 또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는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프 나이가 고안한 개념으로, 설득의 수단으로서 돈이나 권력 등의 강요가 아닌 매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소프트파워의 중요한 특징은 비강제적임.

•문화나 이념같은 비물질적 자원을 통해 상대방을 매혹하여 자발적으로 마음을 바꾸게하여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능력

•매력적인문화→문화상품수요증가→경제력강화→군사력강화.

■ 경기연구원(국제질서를 흔든 코로나 19: 인간안보와 가치연대의 부상)
코로나 19로 인해 국제정치질서와 안보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해졌고
코로나 19로 인해 전통적인 국제연대가 붕괴되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성안보(hard security)에서 연성안보(soft security)와 인간안보(human security)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보건위협이 인류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고 예측 불가함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감했으며, 이에 인간안보가 군사안보에 대한 보조적 지위에서 주된 위협으로 인식이 전환되었다고 주장.

① 경성안보(hard security): 군사력에 기초한 적으로부터의 안전을 의미

② 연성안보(soft security): 질병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의미하며

코로나 19는 위협의 심각성 차원에서 인류공동의 위협으로 등장.

13. 뉴노멀(New-normal)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을 말함

이 말은 새로운 경제 질서를 의미하는 말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장했다. 지난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는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의미가 확장됐고 또한 널리 퍼졌다.

특징1, 재택근무 확대와 탈도시화

특징2, 전자 상거래가 일반화

특징3, 미니멀 라이프 추세 강화

전문가들은 일상이 단순화되고 사람들의 만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와 집 등은 소유보다 임대를 선호하는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이

유행하고, 온라인 강의, 온라인 종교 활동 등이 많아지며 커피숍과

대중목욕탕 등 집객형 서비스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징4, 위생에 대한 관심 증가

특징5, 세계화 퇴조와 지역주의 강화

특징6, 사회적기업가의 역할 증대

14. 위협의 감소와 국가안보 : 자유주의 이론에 의한 국가안보 대안
(교재 69~71)

자주국방은 안보딜레마와 국방의 딜레마를 초래하고, 동맹은 동맹의 딜레마를 벗어날 수 없다. 세력균형 이론은 패권안정 이론 및 세력전이 이론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취약성 극복을 통해 안보를 담보 받고자 하는

정책은 어렵기도 하지만 고비용이다. **저비용으로 국가가 안전해 질 수 있는 방법은 위협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다.

위협을 감소시키는 정책은 크게 3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집단안보**이고, 둘째는 **군비통제**이며, 셋째는 **통합**이다. 집단안보는 유엔헌장을 근거로 침략이나 평화를 파괴한 국가를 대상으로 집단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써, 특정국가가 무력 침공을 당할 경우 집단적으로 침공당하는 국가를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① **집단안보**는 침략국에 대한 집단적 응징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침략국의 침략 위협을 억제하는데 있다. ② **군비통제** 또한 서로가 체결한 협정을 통해 구속력이 발휘되는데, 군비경쟁을 제한 한다는 차원에서 위협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다. ③ **통합**의 방법으로는 연합, 연방, 통일이 있다. 특히 통일은 위협의 근원이 사라진다는 차원에서 위협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

15. 국가이익의 종류

가) 사활적 이익

국가 스스로의 생존 여부와 직결되는 '자기보존'에 관한 이익으로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국익

▣ **국가의 주권, 영토, 국민 다수의 생명, 정치체제, 식량/에너지 확보 등**

나) 핵심적 이익

사활적 이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지만,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성격의 국익

▣ 국가 이익 보장, 주변국과의 우호관계, **초국가적 위협 통제** 등

다) 중요한 이익

사활적·핵심적 이익이 단기간 이내의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반면, 중요 이익은 장기적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국익

▣ 자국에 유리한 국제질서 유지,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 등

라) 부수적 이익

해당 국가의 입장에서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지만, 당장의 국가 생존이나 장기적인 복리의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일종의 '희망사항' 정도

기출12'하) 국가이익의 우선순위와 종류, 우리나라 국가이익의 우선순위/안보정책방향 서술하시오

16. 한국의 안보위협과 우선순위

● 한국의 주요 안보위협

전통적 위협	비전통적 위협
1. 북한의 핵/미사일 2. 미중 패권 경쟁 3. 한미동맹 변화 4. 남.동중국해, 서해, 독도 등 해양 및 도서영유권 분쟁 5. 주변국 군사력 및 군비경쟁 6. 남북한 관계 변화 7. 국내 이념적 대립 심화	1. 대규모 재난사고(화재, 붕괴) 2. 테러/사이버테러 3. 지진 4.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 B(바이오)B(배터리)C(반도체칩) 5. 기후변화 6. 환경오염 7.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 4차산업, 기후변화, 환경오염 : 예측불가, 초고속, 폭발성, 대규모화, 신속한 전이, 속도 및 영향력, 범위와 파급력이 크다.

17. 재난관리 활동의 단계별 조치

① **예방** : 위기발생 이전에 위협과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모든 활동 (법, 제도, 기구, 조직)

- 위기요인 사전제거, 감소시켜 위기발생 방지, 억제
- 활동 : 법, 제도 제개정, 위협과 위험 주기적 평가,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위기대비관련교육, 안전문화 활동 및 홍보

② **대비** : 위기발생시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위해 준비하는 모든 활동

- 사전계획, 준비, 교육, 훈련하여 대응능력 제고, 대응태세 강화
- 활동 : 상황실 운영, 대응자원확보, 전문인력 준비, 실무/행동매뉴얼 준비,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 준비 및 훈련

③ **대응** : 위기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추구하는 모든 활동.

- 신속한 대처로 피해 최소화, 2차 위기 발생 가능성 감소
- 활동 : 재난사태 선포, 인명구조, 재산피해방지, 환자수용, 후송

④ **복구** : 위기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모든 활동

- 제도개선, 운영체제 보완 통해 재발 방지, 위기관리 능력보완

- 활동 :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중장기 복구계획 수립, 복구 예산확보, 피해자 보상, 위기원인 조사

18.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바람직한 구조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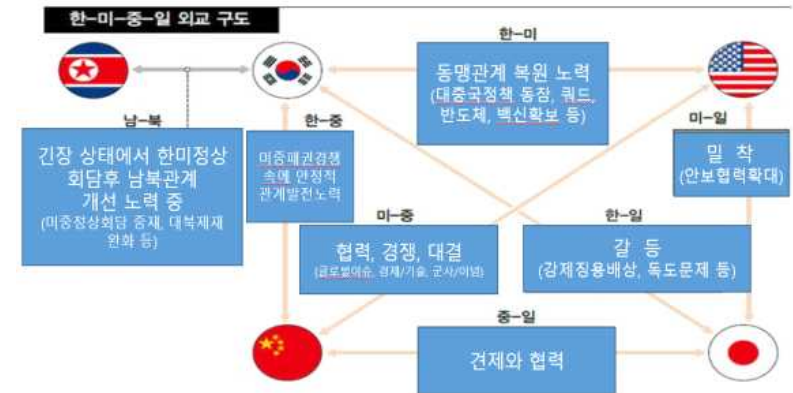
가) 현실태: 전통적 재난관리제도는 재난 유형별 특징성을 강조, 분리관리방식되어 있어서 유사기관의 중복, 과잉대응 야기, 조정통제의 어려움 내재하고 있어 재난의 속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구조 형성 필요.

나) 위기관리체계의 구조적 특성(유통학은 협력)

- ① **통합성** : 위기관리는 예산, 정보, 자원등을 통합해야 효과적
 - * 통합대상, 통합형과 분산형의 장단점 비교
- ② **유기성** : 위기관리는 유기적으로 조직해야 효과적
 - * 중앙집권적 폐쇄적. 경직된 체계로는 실패
 - * 유기적 조직화를 위해 중첩적구조, 분권화
- ③ **협력성** : 다수 유관기관(기관, 단체, 조직) 적극 협력해야 효과적
- ④ **학습성** : 위기관리는 과거의 현장경험을 축적.활용해야 효과적
 - * 위기의 반복. 누적성, 과거사례, 학습통해 준비

19. 한미중일 외교관계

● 한·미·중·일 외교 구도



■ 동북아 안보불안 요인

가. 미중의 패권경쟁

1) 미 국(바이든 행정부)

- 트럼프행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기조 지속 유지
 - 중국은 정치적으로 인권유린하는 독재, 전체주의 국가
- 경제적으로 불공정행위일관, 불법적으로 미국기술 탈취
- 바이든의 대중정책의 핵심은 '동맹의 활용'과 '가치중시'
- 바이든의 대중국제재: 수출입제재, 투자제재
- 자유, 민주, 인권과 같은 가치외교를 통해 새로운영역에서 중국압박 함으로써 갈등영역 확장.
- 자유진영동맹국들과 협력을 내실화, '집단적지렛대'구축을 통해 중국견제
- 무역통상분야에서 국제통상, 규범 정립을 통해 대중국압박
- 핵심 첨단기술분야에서의 탈동조화(decoupling)가속화
- 남중국해 문제에서 항행의 자유작전 지속

- 대만문제에서 전통외교로의 복귀예상
- 기후변화대응에서는 중국과의 협력 및 갈등이 공존

2) 중 국

- 단기간내 미중관계 호전되기 어려울것임
- 자강(自強)방식으로 미중대결의 지구전에 대비
- 쌍순환발전전략과 기술혁신을 중장기핵심정책방향으로 삼음.
(14차 5개년계획, 2035 중장기 발전전략)
- 쌍순환전략의 목적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가치사슬구축에 있으며, 2035 중장기발전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해 2035년까지 2020년대비 두배 수준의 GDP달성을 목표로함.

향후 미중간 대립은 인권문제,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패권전쟁이 벌어질것으로 전망

3) 한 국

- 미중 대립 구도속에서 선부른 양자택일 논리 지양
- 미중갈등과 대립사안에서 '사안별지지'와 '외교원칙의 일관성'추구
-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변국들과의 연대강화 및 다자외교강화를 통한 외교적 자율공간을 확장하는 노력필요
- 미국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미간 정책공감대 형성하는 노력배가 필요

나. 일본의 우경화와 보통국가화 추진

다. 동북아 지역의 전통적 안보역학구도 변화

라. 각국 간 영토분쟁을 둘러싼 갈등 심화

20.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추구방향

가.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 건설

- 북한의 기습.침투 대응능력 강화 위한 비대칭전력 강화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군사력 확보, 군사전략 발전
- 한반도 접근거부능력 확보(해상, 공중) : 대 중국, 일본

나. 한미동맹 발전

- 한미동맹 안정적 발전을 위한 한미 간 사안별 공동인식 우선
 - 북한 비핵화 회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 준비, 맞춤형 확장억제전략 구체화
- 군사적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

다. 대중.대일 안보정책의 발전

- 한중관계 발전 : 경제협력 및 군사.인문.문화 분야 상호협력 확대
- 한일 안보협력 증대 : 한미일 안보협력, 역사 갈등 / 위안부 문제 해결
- 미중 및 중일 갈등구조 하에서 한중, 한일 협력체제 발전
- 해양영유권 분쟁 해결 위한 다양한 외교활동 강화, 유리한 여건조성
- 일제 징용 배상판결 합리적 해결 등

라. 대북관계 개선 및 한국 주도의 평화통일 여건 조성

-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대북정책 개발, 추진
 - : 남북 관계 개선, 북미 관계 정상화
-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유도, 경제발전 협력
- 한반도 통일을 위해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외교안보활동 강화

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발전

- 현존 다자안보협력체제 적극적 활용, 주도적인 역할 수행
 - : ARF(동아시아 지역안보포럼), EAS(동아시아 정상회의), 6자회담 등
-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추진, 동북아 국가들 간 다양한 협력체제 제기
-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 적극 제기, 평화정착 유도

바. 국위선양 및 세계 평화에 기여

- 국가 경제력 등 국력 신장에 따라 국제 평화유지활동 적극전개
- 국제 분쟁지역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 적극수행

21. 반도체 방패

2000년대 나온 '실리콘실드' 개념으로 대표적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대만의 TSMC이며 TSMC의 공격을 받으면 전세계산업이 마비되므로 미국과 EU 등 강대국들이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반도체산업이 대만을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방패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한국의 한국반도체를 보호받는 것이 결국 한국을 방호하는 것인 만큼, 한국 D램, 낸드 없으면 미국이 망할 정도로 '초격차'기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22. 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P4G는 정부 기관과 기업·시민사회 등 민간부문이 파트너로 참여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의체이다. P4G는 민관파트너십 활동을 통해 포용성장을 추구함으로써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파리협정같은 지구적 목표달성 가속화를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17년 9월 출범하게 되었다.

특히 P4G는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기후변화 대응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5개 분야, 즉 ▶식량(Food) ▶물(Water) ▶에너지(Energy) ▶도시(City)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여 개도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3. 바이아메리칸

2021.1.25. 바이든이 무역보호주의 논란속에 바이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 이는 국내생산을 늘리고 일정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납세자의 세금으로 물품을 조달할 때 미국산 제품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는 보호주의 무역조항으로 유럽연합(EU) 등 무역 상대국들로부터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큰 정책이다

예) 국내기업들이 5.21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394억달러(44조원)이 넘는 대규모 미국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도 미국 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조달 계약에서 자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하고 있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첫번째 행정명령으로 '바이 아메리칸'에 서명하였고, 이와 함께 배터리와 반도체 등 핵심 물품의 공급사슬을 점검하였음.

24. 북한에 대한 핵동결의 대가로 대북제재 해제시 문제점.

문재인 대통령이 5.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을 최종 조율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제재를 선불리 해제하면 기존에 보유한 핵무기를 인정하는 '합정'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핵 동결의 대가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일부 풀리면 이후 시간 끌기로 버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경우 기존에 알려진 영변 이외의 핵 시설을 찾아내 폐기하기가 어려워지고 미래에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할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핵 시설을 폐쇄하는 대가로 우리에게 군축을 요구하면 되레 국내 안보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서울경제:5.19일자)

25. 전작권전환 추진 및 로드맵

(1)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

- 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확보
- ②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핵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비
- ③ 안정적인 전작권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2) 문재인정부의 전작권전환 로드맵

- ① 1단계(2019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확정)
- ② 2단계(2020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미실시)
- ③ 3단계(2021년) 완전임무 수행능력(FMC) 검증(미정)

26. 북한의 8차 당대회

▲자력갱생에 기초한 정면돌파전 전개 ▲핵-미사일 강국 목표달성 과시와 지속적인 고도화 의지 천명 ▲선한후미(先韓後美:한국 압박, 미국 대치)의 비랑끝전술을 강조하였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과 방공망을 무력화 할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처음으로 공식화하고 다탄두미사일(MIRV)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시험해 나갈 것임을 공식화 하였다. '핵을 기반으로한 전(全) 한반도 통일'전략을 당규약에 명문화함.

27. 전랑외교(戰狼外交) : 늑대전사 외교

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력과 보복 등 공세적인 외교를 지향하는 중국의 외교 방식으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뚜렷하게 드러난 움직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남중국해 분쟁과 홍콩보안법 직접 제정 등을 들 수 있다

- 전묘외교(戰貓外交) : 고양이 전사의외교로써 중국이 내세운 전랑외교에 대응해 대만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외교정책,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다는 메시지를 확산해 우방국가 확대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음.

28. 중국의 쌍순환정책

○ 미국과의 무역전쟁 극복위한 “쌍순환 정책”

- 미국과의 무역전쟁 ⇒ 더 이상 수출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
- 내수에 기반으로 한 내부 대순환을 경제정책의 기본
- 내부 대순환에 상응하는 대외경제 순환 체제 구축

※ 경제의 내·외 순환이 서로 호응·촉진하는 새로운 발전전략

- 시진핑국가주석이 2020.5월 제시한 것으로 해외시장을 유지하면서도 내수위주의 자립경제에 집중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겠다는 경제전략임.
- 인공지능, 집적회로, 양자컴퓨팅 등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기술분야에 대한 자국내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수립 진행

29. 리쇼어링[Reshoring]

‘제조업의 본국 회귀’를 의미한다.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에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급증하는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자국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30. 중대재해[重大災害]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에서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재해는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하는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한다.

즉,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한다.

-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31.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으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32. 뉴테러리즘

2001년 발생한 9·11 테러와 같이 주체도 대상도 모호한 전쟁과도 같은 무차별적 테러리즘 양상을 말하는 것으로, 슈퍼 테러리즘이라고도 한다. 요구조건과 공격조건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전쟁 수준의 무차별성을 보여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 전통적인 무력에 더하여 생화학무기와 사이버테러 방식까지 사용함으로써 저비용으로 대규모 인명살상 및 국가인프라 파괴가 가능하며 그 색출 또한 어렵다. 특징은 공격주체가 불투명, 종교와 연결, 그물망 조직, 전쟁수준의 무차별 공격가능, 공포의 확산 용이함.

33. 회색지대(Gray Zone) 전략

회색지대(灰色地帶)전략이란 평화와 전쟁사이에서 여러 권력요소를 활용해 정치, 안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이전략이 활용되면 대규모 군사분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 대체로 국제관습, 규범 또는 법률에 도전하고 위반하는 행위가 동반된다.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며 주로

정보조작, 정치적강압, 경제적 강압, 사이버작전, 군사력을 활용한 도발행위 구사
예)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돈바스 전쟁 개시전 여론조작, 심리전, 전자전.

- 중국의 사드배치를 빌미로 한국에 한 무역보복과 불법조업 선단을
활용해 주변국의 어업권을 침해한 행위.
-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금강산 관광지구 독자개발 등

34. 레짐, 국제기구, 국제제도

1. **국제레짐**은 국제관계의 특정한 쟁점(이슈)영역을 둘러싸고 행위자의 기대가 수렴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원칙, 규범, 규칙 및 정책결정 절차의 총체로 정의된다. 레짐의 구성요소로는 원칙, 규범, 규칙, 정책 결정정자가 있다. 국제레짐은 UN이나 NATO처럼 명시적 규범에 근거해 존재할수 있고, 상호확증파괴(MAD)처럼 암묵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2. **국제기구**는 인력, 사무실 등을 포함한 물리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반면, 레짐은 그런 국제기구가 행사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3. **국제제도**는 훨씬 넓은 개념이다. 제도주의적 국제정치학자들의 등장이후 국제제도는 국제기구, 국제레짐, 협약(covention)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문) 미중패권 전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1. 상호전략

가. 미국의 대중전략

- 중국의 힘이 갈수록 커지는 역사적 상황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아시아의 활력을 나눠갖기 위한 미국의 국가전략(오바마)
-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시아 재균형에서 미국우선주의로 전환되면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과 갈등이 발생→ **바이든, 트럼프행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 유지**
- **시진핑의 신형대국관계와 미국제일주의는 양강대국사이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압박.**

- 과거 : 중국을 국제체제에 편입시켜 정치, 경제, 환경, 안보목표에 기반한 협력관계 구축
- 현재 : 중국의 군사적 근대화 견제 위해 동아시아지역에서 최상의 군사력 유지,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압박 → 바이든, '동맹활용'과 '가치중시'

나. 중국의 대미전략

- 신흥대국 외교론 : 중국이 신흥강대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이해를 적극 개진

* **신형 대국관계론(시진핑)** : G2체제, 미국과 협조 즉 미국과 대결은 하지 않지만 대결을 해야 한다면 대결을 회피하지 않겠다.(남중국해 문제 등)

2. 주요 쟁점

가. 무역마찰 원인 : 기형적으로 나타난 미·중간 수출입 불균형. 양국의 무역전쟁은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전략.

나. 홍콩문제 : 홍콩정책법, 홍콩인권법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중국의 반대
다. 대만문제

- 1) 미국 : 1979년 미중수교 이후 미국은 대만에대한 **전략적 모호성** 유지
(이중역지 : 대만의 일방적 독립선언, 중국의 대만무력 침공)

가) 중국의 무력침공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란점을 분명히하는 **전략적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

나) 반도체생산지 대만의 전략적 값어치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대만해협을 최대의 화약고로 부각시키는 원인으로 대두

다) 바이든은 대만에 비공식 특사파견, 미·대만간 해안경비협력 협정 체결, 양국관리간 교류장려하는지침 발표 등

- 2) 중국 : 대만은 중국의 일부, 양안문제 간섭하면 무력불사(시진핑)

라. 신장위구르족에 대한 인권유린

- 1) 블링컨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위구르족 탄압을 종족학살(genocide)로 규정한데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

마. 북핵문제

- 1) 미국 : 불량국가, CVID → FFVD → **CVIA식**에 의한 핵 폐기 요구
- 2) 중국 : 이중적 자세(북한의 핵개발에 반대, 대북압력행사에 소극적)

바. 미사일방어문제

- 1) 미국 : 본토미사일방어망(NMD), 동맹국 및 해외주둔미군 보호(TMD) 추진
한국, 일본 등에 중거리 미사일 설치 희망

○ 미국이 추진중인 사드(THAAD)업그레이드 방안

① 사드의 발사대 일부 또는 전체를 포대와 분리 배치한뒤 원격발사

- 사드요격범위 확대 등 기술적 유용성 강화.

② 사드 레이더를 이용해 패트리엇(PAC-3 MSE) 원격으로 발사

- 패트리엇 요격범위 확대 및 대응시간 단축

- ③ 사드와 패트리엇의 레이더·발사 시스템을 상호 연동시켜 단일포대처럼 사용
 - 상하층 방어망 통합운용으로 요격시간 단축 및 사각시대 해소
 - * 사드 운영유지와 성능향상을 위해 21년도 예산 10억달러(1조 1800억원) 배정

2) 중국

- NMD 반대 : 전지구적 전략적 균형과 안정파괴, 강대국 간 군비경쟁 야기
- TMD 반대 : 일본(미일동맹 강화, 중국 봉쇄)과 대만 설치(대만 독립 의지) 반대
- 중거리 미사일 설치 반대 :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설치시 사드 보복 이상으로 보복.

3. 한국의 대응전략

- 가. 미중관계 악화에 대한 한국에 파급효과 최소화
 - 한미동맹 유지 +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
 - EPN(경제번영네트워크)과 QUAD(인도태평양전략)에 성급히 참가하여 불이익 초래되지 않도록 적극적 외교 노력을 통한 유연성 발휘 필요.

문) 미중의 전략대비 우리정부의 대응방향

미중의 틈에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미중 어느 한쪽에 선택이 강요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원칙에 근거한 국제질서 준수

1. 기본전략과 미중갈등해결의 대원칙

가. 기본전략

- ① 미중의 국가전략과 우리의 국가전략의 조화로운 연계 추진.
- ② 안보와 경제에 대한 미중의 영향력을 줄이는 정책 추구
- ③ 지역내 다자안보기구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 ④ 북한 및 주변국 위협대비 군사력 증강
 - * 정찰/감시자산, 원거리 타격 / 신속대응전력 확보
- ⑤ 우리의 증강된 국력이 반영된 새로운 한미관계 설정
 - * 한국 : 재래식무기와 사이버, 우주, 해양, 환경 등과 같은 비전통적위협에 적극 역할
 - * 미국 : 한반도에서 핵미사일 확장 억제
- ⑥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고화하되 개별적 사안은 원칙을 가지고 대응
- ⑦ 한반도 통일위한 우리주도의 통일기반 구축 전략 추진

나. 미중갈등 해결의 대원칙

- ① 원칙을 정해서 사안별로 유연성 발휘
 - 양국의 전략과 우리의 신남방/신북방 전략 연계
 - 어느 한쪽에 선택을 강요받지 않는 정책 추구
- ② 원칙에 근거한 국제질서 준수가 핵심
 - 안보와 경제 양측면에서 국가이익 강화
 - * 한미동맹과 한중전략적동반자관계 견지
 -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국제규범 준수
 - 투명성, 개방성, 법치의 가치와 원칙지지
- ③ 미중의 영향력을 줄이는 정책 추구
 - 무역 다변화, 지역내 다자안보기구 창출
 - 자주국방력 강화를 통한 동맹의존도를 낮춤

2. 미중의 전략대비 우리정부의 대응방향

- ① 미중의 전략과 우리전략의 조화로운 연계추진
 - * 신남방, 신북방정책을 조화롭게 연계하여 국익추구
 - * 인도태평양지역은 글로벌 성장엔진으로 부상되는 지역
- ② 안보와 경제에 대한 미중의 영향력을 줄이는 정책 추구
 - * 자주국방력 강화, 다자안보협력, 양국의 무역의존도를 줄이고 생산, 무역의 다변화, 다각화로 제 2의 무역 분쟁 회피(중국 25%, 미국 12%)
 - * 신남방, 신북방,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등 경제벨트 구축
- ③ 북한 및 주변국 위협대비 군사력 증강 및 한미동맹 공고화
 - * 정찰/감시자산, 원거리 타격 / 신속대응전력 확보
- ④ 지역내 다자안보협력 기구 창출
 - * 아시아국가들과 다자안보협력기구를 창출 미중을 협력관계로 유도
- ⑤ 우리의 증강된 국력이 반영된 새로운 한미관계 설정
 - * 책임분담에 기반한 한미관계 격상
- ⑥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고화하되 개별적 사안은 원칙을 가지고 대응

- ⑦ 미중갈등이 비핵화와 연계되지 않도록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위한 외교안보전략 추진

3.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3가지(3C)

가. 협력(Cooperation) : 글로벌 이슈

- 바이든은 글로벌이슈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
- 코로나 19, 기후변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북핵문제 해법 등.

나. 경쟁(Competition) : 경제와 기술

- 경제와 과학기술분야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
- 중국과 맺은 1차 무역합의는 존중하지만, 트럼프식 무모한 징벌적 관세전쟁은 피하겠다는 의지.
- 초당적 합의에 기초한 미국식 산업정책을 위해 R&D투자, 교육투자, 인프라구축 등을 과감하게 실현.

다. 대결(confrontation) : 군사와 이념

- 중국의 군사적 팽창주의에 대해서는 대결과 억제.
 - 바이든행정은 중국을 미국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로 인식.
 - 중국의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공격행위증가, 미본토에 대한 위협 지속, 방첩과 사이버안보분야에서는 중국을 명시적인 적으로 간주.
- 중국공산당 타도와 같은 이념 대결은 자제할 것이나, 홍콩, 위구르 등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사안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

문) 사이버테러 대비 발전방향

1. 국가차원

- 사이버테러방지법률제정 또는 관계법령 개정
 - 가칭 “국가사이버테러 방지법” 제정, 민간기업 정보보호 현, 국가사이버테러안전관리규정은 대통령훈령-민간구속력이 없다,
 - 금융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개인정보 저장체계에 “국정원”기술적 지원허용
- 사이버공간 보호대책 및 정보보호 기술 개발 강화
 - 인증확대, 기술개발법제화/산업화 추구, 정부예산 확대
- 사이버보안전문인력 양성 및 대응체계발전
 - 전문인력5,000명 양성, 대학관련학과 정원확대
 - 기관별보안관제 센터 설치 및 시속대응체계 확립
- 민간시설 및 국민 인터넷 보안의식 강화
 - 보안교육, 점검, 무료백신제공/업그레이드

2. 기관/업체차원

- 정보통신장비 “납품업체” 보안성검사 강화
 - 악성코드 서버내장 해킹원천봉쇄, 프로그램도입 등에도 적용, 전수조사
- 주요통신망에 대한 “망분리정책” 의무화
 - 인터넷망, 인트라넷망(내부망), 물리적단절의무화로 악성코드유입 근절
- 업무담당자 보안의식 강화추진
 - 보안정책 숙지/이행 철저, 신상필벌 제도화

문) 사이버테러에 대한 위기관리단계별 대응방안

1. 예방

- ① 사이버테러 관련법제정: 민간분야 통제근거마련(민관군 통합대비)
- ② 메인서버비인가 인원 접근차단
- ③ 사이버테러 수법에 대한 정보공유(관련기관-민간)
- ④ 방호벽 구축

2. 대비

- ① “국정원”중심 사이버테러 징후포착, 경보체계 구축 필요
- ② 대비 매뉴얼작성 및 반복훈련 숙달
- ③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국경 없는 사이버! 국내외자행)/ 유지

3. 대응(사이버테러 발생 또는 징후포착)

- ① 피해최소화 조치, 징후포착 민간공공분야 및 기관
- ② 주관기관장에 통보→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
- ③ ②항의 장은 사이버정보발령(피해확산방지)
- ④ 피해 심각시 국정원장은 “범 정부적 사이버위기대책본부”구성운영
- ⑤ 국가안보실(사이버 대응팀)은 국가차원의 최종컨트롤타워역할 수행

4. 복구

- ① 신속한 복구추진을 위한 원인분석(국가능력 총동원)
 - 국정원 적극지원 필요(민간, 공공기관의 능력제한)
- ② 피해복구:국가차원의 가용자원 투입
 - 복구에 필요한 전문인력자원의 한계(민간, 공공기관) 극복 위해 국정원 및 중앙행정기관 적극지원 필요

문) 해커 공격에 대한 대응책 (2020.1.6.2 동아일보 사설)

한국 대기업의 해외법인 여럿이 최근 국제 해커집단들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데이터가 유출됐고, 돌려받는 대가로 금전까지 요구받았다고 한다. 지난달 한 해커집단이 미국 송유관업체를 랜섬웨어로 공격해 운영을 마비시키고 440만 달러를 뜯어낸 것과 비슷한 일이 한국 기업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 랜섬웨어의 개념 및 한국의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에 대한 보호대책
몸값이라는 뜻의 랜섬(ransom)과 악성코드(malware)의 합성어인 랜섬웨어는 해커들의 주요 공격 수단이다. 기업, 정부기관 임직원의 이메일 등을 통해 시스템에 침투해 자료를 빼내거나, 암호를 걸어 데이터를 못 쓰게 하고 돈을 요구한다.

해커조직의 공격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추세로 시스템의 틈새가 커지고, 가상화폐 시장 확대로 대가 챙기기도 쉬워져서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기업, 기관들이 보안시스템과 임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 역시 우리 기업이 언제, 어디서 해커 공격을 당해도 신속히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문) 신종 재난위협대비 발전방향

○ 중국발 신종코로나(코로나 19)는 초국가적 재난 위협의 심각성과 통합재난관리체계의 중요성에 많은 교훈

1. 범정부차원의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필요

-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은 국경초월 빠르게 확산, 복합 재난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복합재난 예상 시 주관기관 중심의 대응보다는 “중앙안전 관리 위원회” 및 “중앙대책본부”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기관 조정 통제 필요(예방 대비절차 수행강화)
 - * 중점관리업체 비상대비 담당관은 업체 특성에 맞게 대응 필요(직업 출입시 온도측정, 방역, 격리 등)
- 발생국가 국민에 대한 국내입국 절차 강화하고 공항 검진체계 엄격하게 적용 필요
- 재난관리 예산 대비 자원의 적시지원 등 입체적인 범 정부차원의 통합대응 필요

2. 지역사회의 대응능력(재난사전예측, 회복탄력성)강화 필요

- 대규모재난(산불, 지진, 태풍, 가축전염병, 신종바이러스)피해지역 피해화 불가피(경제, 사회적 충격)
- 재난발생원점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재난” 사전 예측, 재난유형별 특화된 재난보험개발,
 - 관련업종간 상호부조 및 지역공동체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대응능력강화

3. 국제협력(또는 남북재난협력) 활성화

- 신종코로나 같은 초국가적 재난의 특성은 초 국경성, 불가측성(예측성), 복잡성으로 인하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불가피

- 북한 : 공동대응 필요한 동물매개 전염병, 감염병, 산림해충, 접경지역 산불·홍수 등 남북재난협력 활성화
- 인접국 : 미세먼지, 신종코로나, 황사(중국), 원자력 사고(일본) 등과 관련 신속한 정보교환 등 대응 필요

문) 위기상황 발생시 위기관리 상호협력방안(정부차원)

- ① 군사분야와 비군사분야 조직간 상호지원체계 구축
- ② 위기관리조직간 협력연계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 ③ 유관조직간 정보화체계구축
- ④ 현장중심의 위기관리협력체계 설계
- ⑤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도입

문) 비상대비담당자 임무

- * 국가동원업무 계획, 준비, 집행
- * 소속기관(업체)의 장을 보좌, 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조정·통제 및 확인
- ① 충무계획 작성 * 실시계획, 동원자원조사
- ② 비상 및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
 - * 을지, 충무, 민방위훈련, 임직원 안보교육
- ③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 업무협조·조정
 - * 민방위자원관리 / 훈련, 예비군업무 조정, 협의
- ④ 직장방호 및 보안업무에 관한사항
- ⑤ 비축물자 및 동원물자 관리
- ⑥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업무 관련부서와 협조
- ⑦ 기타 전시업무 수행과 관련되거나 지시받은 사항

문) 위기상황발생시 조치절차(중점관리업체 비상대비 담당관)

- ① 상황접수 및 전파
 - TV, 주무부처 상황전파 수신 - 즉시 대표(사장)께 보고, 사내상황전파
- ② 충무계획(실시계획) 시행준비
 - 충무시행 유관부처 시행준비지시 -동원물자, 비축물자확인(책임자활용)
- ③ 민방위사태 대비 및 준비
 - 대피장소, 이동로, 방송망점검 등 매뉴얼 시행준비
 - 민방위관련기관 연락망점검(필요시, 민방위 동원협조)
- ④ 회사방호 및 보안업무 상태확인
 - 테러/사이버테러 방지대책 강구
 - 평시 : 경비업체, 전시: 직장예비군
- ⑤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시행 또는 관련부처 협조
 - 인력/물자 반출입통제
 - 상황보고(즉각)체계유지
 - 실시계획 시행간 안전관리부처 협조(무위전력손실예방)
- ⑥ 국가동원령선포 시 실시계획 즉각 시행
 - 실시계획 임무수행 인력, 물자 집결
 - 중앙부처(시도)명에 따라 실시계획시행
 - 임무완료보고(상기)

문) 미국의 8대외교과제

- ① 팬더믹 억제
- ② 경제위기극복,
- ③ 민주주의 회복,
- ④ 이민정책,
- ⑤ 동맹복원,
- ⑥ 기후변화,
- ⑦ 기술분야 에서 리더십확보,
- ⑧ 대중봉쇄

문) 바이든 시대 대외정책 두축 : 다자주의, 가치·규범외교

① 다자주의

- 국제제도 및 기구, 레짐에 대한 존중과 복귀,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 강화, 바이든이 공언하고 있는 파리기후 협약 재가입,

환태평양협정(TPP)재가입 검토,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귀검토 등, 과거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의 반전임.

② 가치·규범외교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와 규범중시, 규칙기반의 무역질서 강화 등을 포함하며, 이는 트럼프가 강조해온 거래적 국제관계관의 반전임.

문) 예상되는 안보위협 / 대응

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 핵보유국 대비 한국형 3축체제와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우선 발전

② 미중패권경쟁 글로벌경제 악화(중국 25%, 미국 12% 의존)

→ 글로벌 경제위기에 선제적 대응, 경제지도 다변화

(신남방, 신북방), 핵심기술의존도 최소화, **BBC사업의 주도** 등

③ 한미동맹의 변화위협 → 대칭적, 호혜적변화, 포괄적 전략동맹, 안보정세와 **전작권전환을 고려한 한미동맹** 구축

④ 국내적 다양한 사회적 갈등→ 다양한 국가의사 소통기구와 합의기구 제정, 갈등해소를 위한 소통강화.

문) 최근 동북아 안보상황을 고려한 우리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가. 안보상황 : 미중패권전쟁, 자국주도의 해양질서 구축, 통상체제 변화, 군비경쟁 본격화, 미북 비핵화협상 교착, 한일 과거사문제 갈등 등.

나. 국가안보전략(대책)

① 첨단전력 증강을 통한 자주국방 구현.

- 세계에서 전통적 안보위협이 가장 높은 곳은 한반도임

북핵, 미사일 등 위협과 주변국 군사력을 고려한 자주국방 조기실현

② 한미동맹을 활용한 북한의 비핵화 달성.

- 한미동맹을 호혜적인 포괄적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

③ 동북아 주변국과 우호협력 증진을 통한 한반도 안정 및 평화통일 추구.

-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주변강국과 협력관계를 강화, 한반도에서 전쟁방지와 통일여건을 조성.

④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유리한 국제질서 조성.

- 국가이익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 역할 강화, 초국가적위협 공동대처

문) 최근 국제사회에 등장한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우리정부의 대응방향

1. 국제사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비전통적 안보위협

① 초국가적 위협 :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 테러, 사이버테러, 마약밀매, 해적활동 등

②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로 지역별 이상기후에 따른 위협.

* 태풍 및 집중호우 증대, 극심한 한파 및 폭염 현상 초래

* 해수면 상승, 적조 및 가뭄 등 자연재난 증대

③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대규모 환경오염에 따른 위협이다.

* 대규모 수질오염, 해양오염 증대, 극심한 (초)미세먼지증대로 생활 불편, 각종 질병 유발

*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은 인간과 동물에 심각한 위협

↳ 인간을 위협하는 신종 감염병 16종, 가축전염병도 돼지열병 등

④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대규모 사회재난이다.

* 도시화·산업화로 곳곳에 사회재난 요소 잠재

: 대규모 화재, 건물붕괴 사고, 화학물질 / 유독가스 누출

* 이동수단의 발달, 고속주행에 따른 교통사고 증대

2. 비전통적 위협에 대비한 우리정부의 대응방향

① 위기관리 법령 및 조직체계를 실효성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 사이버테러 법령 미비, 관련분야 법령 제정, 통합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② 위기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 과거의 위기관리는 정부주도의 하향식 위기관리
-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
- ③ 사고 현장의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 현장 전문인력 배치, 현장매뉴얼 구체화, 실전적 훈련을 통해 현장능력을 제고. 특히 시군구의 위기대응체계 강화 강조

문) 북한의 비핵화 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

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전략

- ① 북한체제를 우선 보장받으려는 전략
 - * 비핵화 보다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우선
- ② 단계별 동시조치 전략
 - * 살라미식 전술에 입각하여 단계별로 최대한 보상받으려는 전략 (현재핵, 미래핵, 과거핵: 지금까지고 있는 핵무기)
- ③ 북미협상에 유리한 전개 위해 갈등과 협력 반복

나. 안보이론적 관점에서 대응방안

- 협상 난항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우선순위 문제
- ① 현실주의의 관점 : 힘을 바탕으로 안보정책 추구
 - * 북미협상파기, 대북제재 강화, 한미군사훈련 강화, 첨단무기 및 전력보강
 - ② 자유주의적 관점 : 협력을 통해 안보이익 추구
 - * 미국과 협의 선제적보장을 위한 종전선언, 불가침 협정 이끌어 내는 조치
 - * **한미정상회담(2021.5.21.)에서 판문점 선언 및 싱가포르 선언 존중**

문) 위기관리의 유형

- ① 교섭적 위기관리 : 의도(목적) 도발행위, 협상
 - * 상호교섭, 흥정과 협상, 군사적, 경제적(제재,보상)
- ② 수습적 위기관리 : 실수, 오판, 우발적 사건, 대형재난 사고
 - * 국가간 우발상황 : 협조기구, 동맹.국제기구와 협의, 정보교환, 공조체계 확립 등

- * 재난위기 : 현장위주 위기관리, 피해확산 방지, 구호
- ③ 적응적 위기관리 : 국제질서, 구조에 갑작스런 변화시 (세력균형, 동맹관계, 국제정세변화 등)
 - * 실제파악, 상황분석, 변화에 대한 대응, 적응

문) 우리나라 위기관리의 문제점/발전방향

가. 문제점

- ① 법과 제도
 - 위기관리기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부재
 - 동원법률 이원화 : 비자법, 전시자원동원에 관한법률(안)
- ② 조직
 - 사후대응개념으로 조직이 발전되어 왔다.
 - 위기유형별 회의체와 대책기구가 별도 운용
 - 지자체 위기관리 조직 취약 : 업무체계 일원화 미흡, 전담전문인력 부족, 비선호 직위
- ③ 자원관리
 - 동원은 전쟁을 대비위주 개념과 제도로 발전
 - 위기유형별 자원 분산운용, 낭비가 심함.
- ④ 연습 및 훈련
 - 위기유형별로 연습과 훈련을 분리 실시
 - 훈련은 많으나 매너리즘에 빠지고 효과 저하
- ⑤ 전문인력
 - 법과 제도, 조직을 운용하는 전문성이 중요
 - 비상대비 전문가 부족, 비선호 보직으로 미충원 및 조기순환

나. 위기관리체제 발전방향

- * 법, 조직, 현장중심, 거버넌스, 수평적 관계설정, 매뉴얼, 실시간 정보공유, 자원통합, 컨트롤센터/허브 구축
- ① 통합된 노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위기관리기준법 제정
- ② 위기유형별 회의체와 대책기구를 통합하여 효율성 제고

- 예) 읍면동협의회 : 4대 법령 위기유형별 조치
- ③ 동원개념 개선 : 전통적 + 비전통적 위기대응
 - 자원통합 활용을 위한 연구, 관리시스템 구축
- ④ 연습 및 훈련
 - 유사한 연습과 훈련통합, 평가 강화
 - 내실있는 매뉴얼 작성 및 훈련
- ⑤ 전문인력
 - 교육과정, 전문인력 배치, 전문인력 인사관리 관심
 - 시군구에 자격을 갖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
 - 기타. 현장을 증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위기관리 조직 발전
 - 현장중심 대응 보장, 현장 지휘통신체계 확립, 다양한 소통/협력
 - 가능토록 지휘체계 구축, 매뉴얼 구체화
 - 국가재난안전 무선통신망 조기구축
 - 지자체 위기관리 전담조직 편성, 전담공무원 보직/ 지방자치단체장
 - 위기관리평가제도입 능력부족시 인사조치
 - 예방과 대비위주 재난정책 추진(예, 내진설계 등)

문) 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① 작성순기를 준수해야 한다.
- ② 충무계획들 간에 연계성을 유지해야 한다.
- ③ 환경 및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 ④ 악조건을 가정하여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 ⑤ 자체 실정에 부합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 ⑥ 충무사태별 조치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 ⑦ 초기단계와 긴급단계의 소요량 판단을 다시해야 한다.

문) 비군사분야 비상대비 발전방향

1. 정부기능 유지

- ① 지자체 비상대비 업무 활성화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 ② 중앙정부의 집행기능을 지자체에 이양

- ③ 지자체장이 통합방위본부장 역할토록 법령 개정
 - * 개별법으로 난립, 중복되는 협의회 및 대책기구를 통합
- ④ 분야별로 분산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을 통합하여 실시

2. 군사작전 지원

- ① 전평시 자원통합관리 체계 구축
- ② 동원관련 법령 일원화
- ③ 동원령 선포조건 개선
- ④ 부분동원령 선포가능시기를 조정, 평시법으로 관리

3. 국민생활 안정 유지 측면

- ① 전시대비 전통적 안보개념 → 포괄위기 관리
- ② 국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원을 평시부터 지정 관리
- ③ 정보전파체계 보완
- ④ 핵 공격시 방사능 오염범위 탐지체계 보강
- ⑤ 생존권 보장위한 주민대피시설 및 치료제 확보
- ⑥ WMD 공격시 주민행동요령 교육 및 훈련

문) 북한군 전쟁양상을 고려한 비상대비 발전방향

가. 정부기능 유지측면

- ① 지방자치법 제정
 - * 비상대비 업무 책임, 권한을 지자체위임
 - 중앙정부는 감독/평가, 신상필벌
- ② 중앙정부의 비상대비 집행업무를 지자체 이양
 - * 중앙정부는 기획분야 전담, 나머지는 지자체 이양
- ③ 지자체장이 지역통합방위본부장 역할토록 통합방위법 개정
 - * 지자체장이 군경, 소방, 민방위 동원
- ④ 분야별 분산된 비상대비 훈련을 국가비상대비
 - 종합훈련으로 통합

나. 군사작전 지원측면

- ① 이원화된 동원관련 법령 일원화

- * 동원준비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집행은 전시법(안)
- ② 위기관리기준법 제정 및 자원통합관리체계 구축
- ③ 동원령 선포조건 개선
 - * 북한의 하이브리드 전쟁양상 고려 선포조건 개선
 - : 충무 2종이후 중대교전 → 전사비상사태시
- ④ 부분동원령 선포시기 조정 / 평시법으로 개선
 - * 충무 3종시(전시법) → 국가위기사태선포시(평시법)

다. 국민생활 안정유지 측면

- ① 비상대비 개념 확대 : 전시대비 → 전평시대비
- ② 국민생활 안정 필요자원 평시부터 지정/관리
- ③ 적 화생방공격대비, 경보전파체계 / 민방공 대피훈련 강화
- ④ 핵공격시 방사능 오염탐지체계 보강
- ⑤ 핵공격시 주민대피시설 / 치료제 확보
- ⑥ 핵공격시 주민행동요령 홍보 / 행동절차 훈련 강화

문)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계 가능성

- 신남방 정책 : 아세안, 인도를 주변 4강 협력수준으로 향상,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추진, 3P구축, 인적·물적 교류확대, 교역·투자·방산·인프라 구축
 - * 3P(사람, 평화, 상생번영공동체) 구축과 북핵문제와 초국가적 위협 등 주요사안 협력 강화
- 인도·태평양 전략 : 지역내 중국의 패권적 국제질서 추구 비난, 모든 국가들의 주권과 독립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열린투자, 투명한 합의, 공정하고 상호주의적 무역, 항해 및 비행의 자유, 국제규칙과 규범 존중

1. 외교·안보적 연계가능성은 사안별로 다르다.

-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방지를 위한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정책에서의 적극적 협력은 다소 떨어질것으로 보나, 북핵문제 해결, 코로나 19 같은 초국가적 위협 해결분야 협력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 쿼드가 중국을 겨냥한 NATO식의 군사협력체로 발전가능성은 낮다.
 - 백신전문가 워킹그룹, 핵심적 신기술 워킹그룹, 기후 워킹그룹 등

2. 경제적 연계 가능성은 높다.

- 중국 중심의 교역 다변화 추구하고 신성장 동력을 인도 - 아세안 지역에서 창출
- 열린투자, 투명한 합의, 자유롭고 공정한 상호주의 무역 혜택 증가

3. 군사적 연계 가능성은 낮다.

- 연루의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 사안은 원칙을 가지고 대응
- INF배치, 남중국해 개입문제에 대한 신중한 대응 등
 -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지양하고, 한국이 전략무기를 개발토록 추진

문) 북한 핵위협 대비 정부의 대응전략

가. 북한 비핵화 유도 전략

- ① 북미 비핵화 회담의 중재자 역할 재정립
 - 북미 양국이 진정성있게 비핵화 회담 임하도록 유도
 - 대북한 : 비핵화시간표, 신고/검증체계 합의 촉구
 - 대미국 : 대북 비핵화 전략 공유 협의
- ②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 및 제재의 신축적 적용
 -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는 충실히 이행
 - 비핵화 견인을 위한 남북협력은 미국과 협의후 시행
 - 북한의 살라미식 비핵화 전략 역이용
 - * 비핵화 실질조치시 단계적 제재해제 방안 제시

나. 북한 핵 위협 대비전략(단, 중기적 측면)

- ① 한국 독자적 비핵 첨단전력 조기확보
 - 핵, WMD대응체계 구축
 - 북한 SLBM무력화 위한 전력증강
 - 북한의 미사일 공격체계 무력화위한 전자전, 사이버전 능력 강화
- ②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강화
 - 한미 4D작전능력 강화, 핵우산 구체화
 - * 4D 작전개념 :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d)
- ③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호체계 강화, 통합위기관리체계 구축
 - 핵 피폭대응 국가위기관리체계 정립

- * 컨트롤타워, 조직구성, 중앙부처와 지자체 협업체계 정립
- 실효성있는 대피체계 강구
- * 민방위체계 개선, 대피시설 확보, 대피요령 숙지 및 훈련
- 대량사상자 처리능력 강화
- * 환자수습체계 확립 전담병원지정, 응급처치/환자수송/입원체계, 약품비축
- 전재민 수용능력 확보
- 국가중요시설, 핵심시설에 대한 EMP대비
- ※ 충무계획 실효성 보장 : 악조건을 고려한 계획수립 및 훈련

다. 북한 핵위협 대비전략(장기적 측면)

근거 : 박휘락, 북핵외통수“비핵화에서 핵균형으로”(2021.5.15., 북코리아)

① 핵공유

- 확장억제나 핵우산은 북한의 ICBM이나 SLBM을 거의 완성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
- 대책으로는 자체 핵무장은 NPT위반으로 불이익 초래, 유럽의 나토 동맹국이 시행하고 있는 핵공유(Nuclear sharing) 필요

② 예상자위

- 그동안 추진해온 선제타격은 30분내 탐지-식별-결심-타격의 길체인 완료개념은 비밀장소에서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공격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타격곤란
- 대책은 ‘예상자위권’ 발동하여 공격을 받기 이전에 조기에 타격필요

③ 미사일방어

- 한국의 미사일 방어수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수 없다.
- 한미연합사 통제하에 주한미군 미사일 방어와 유기적인 통합으로 중북이나 남비를 예방하면서 유사시 일원화된 대응가능

④ 급변통일

- 지도자 우고가능성은 희박하며, 북한의 권위주의적 정권의 누적된 엔트로피를 견디지 못하여 붕괴될 가능성 상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제제재로 민생파탄, 코로나 19로 더욱심각)
- 한반도 상황에 맞는 새로운 합의 통일의 모델 구축 필요

- 다양한 모든 대안을 폭넓게 논의, 현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적 지지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 한미동맹 갈등사항과 대응방향

가. 갈등사항

- ①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전략 변화: 북한 인권문제, 반도체 패권 등
- ② 미국의 안보전략과 충돌
 - 연루의 딜레마 예상(INF미사일, 남중국해 분쟁 연루)
- ③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감축, 철수에 대한 갈등
- ④ 한미양국의 대북정책 갈등
- ⑤ 전작권 전환에 대한 갈등

나. 갈등 대응방향

- ① 정세변화에 부응한 동맹의 변화추구
- ② 상호호혜적 대칭적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 ③ 한미동맹은 강화하되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나가는 정책 추진
- ④ 한미 상호 긴밀한 접촉과 협조로 갈등사항 사전 조정
- 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한위협 축소, 다자안보 추진 등

문) 전작권전환관련 우리정부의 바람직한 대응방향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2014년 합의)

- ① 한국군의 연합방위주도 능력 확보
- ②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구비
- ③ 안정적 안보환경

① 2019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완료)

- 코로나 19로 인하여 FOC, FMC 미실시

- ②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 우선 확보
- ③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초기필수 대응능력 구비

* 원거리 정보감시, 전략표적 타격력 미흡

- ④ 북핵문제 해결이전에 전작권 전환 신중 추구

* 전작권 전환과정에서 종전선언 등 한반도의 다양한 안보환경 변화 예상

작전통제권의 변천

**작전통제권은
여건의 성숙에 따라
점차적으로
환수하고 있지요.**

출처 :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14)

- ✓ 1950. 7. 14.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
- ✓ 1994. 12. 1.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 ✓ 2005. 9.
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시작
* 전환시기 2차례 연기
- ✓ 2014. 10.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합의

문) 미중 기술패권 경쟁 동향과 시사점

1. 개 요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행정부의 강경입장 그대로 유지
- 미중무역마찰 갈등에서 시작된 대립은 기술패권전쟁으로 더 확산
- 기술패권의 승패에 따라 세계최강국의 지위 유지가 가능, 경쟁심화예상

2. 바이든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 바이든 정부의 핵심통상정책 : 자유무역, 다자주의, 미국의 글로벌리더십회복
- 대중국정책 강경기조 유지, 동맹국연합을 통한 간접적인 대중국경제전략
- 고율관세 부과보다는 동맹국과의 공조체계복원, WTO회원국들의 공감대 형성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구사
- 자국내 생산강조, 미국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
- 바이아메리칸을 통해 미국기업제품 구매확대, 자국산 제품사용확대

3. 중국의 부상과 주변국의 견제

- 경제규모, R&D지출 등에서 국제적공급자 역할, 주요핵심기술의 경쟁력제고
등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국에대응한 패권국가 지향 본격화.

- 중국의 GDP규모는 1980년 3030억달러에서 2020년 14.7조달러로 연평균 22.6% 증가. 미국은 중국과 2020년에 1.4배 수준임.
- 미국과 유럽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 5G나 반도체 등 유망핵심기술 공동개발전략,
 - 미국과 유럽이 공유하는 디지털 사회관리를 위한 민주적 접근법 발전,
 - 디지털 독재주의 확산을 제지하는 국제적 외교전략 개발 등
 - 화웨이 등을 제재하는 정책보다는 기술표준을 선점하고 인재를 양성 및 유치하는 등의 정책 추구

4. 미중 기술 패권 쟁점분야

○ 5G

- 중국은 화웨이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수준이 빠르게 상승, 미국과 동등 수준으로 성장, 5G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로드맵 마련
-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이동통신기술은 미국과 동등 수준, 특히 이동통신시스템분야는 중국이 세계 최고기술보유국으로 등극
- 화웨이는 미국제재에도 불구하고 5G세계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임.
- 미국도 5G Fast Plan으로 인프라를 구축중이지만 규모면에서 중국에 뒤짐.

○ 반도체

- 미국이 반도체 제조기기, 설계, 반도체 제조부문에서 전체의 39%차지, 일본과 유럽, 대만, 한국 등은 53%, 중국은 아직 6%에 불과한 수준.
- 중국은 중국제조 2025와 국가IC산업발전지침을 통해 자체적인 반도체역량발전
그러나 중국은 열등한 기업의 비중을 높여 세계반도체산업의 혁신을 저해,
중국의 정책으로 매년 5100건의 미국특허가 감소하는 효과 초래
- 미국은 연방정부예산지원확대, 정부, 기업, 대학간 협력 촉진, 미국내 생산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의 CHIP 법안발의 및 파운드리 법안제정을 통해 산업 재정비중

○ 인공지능(AI)

- 인공지능기술은 미국이 선도, 중국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임
- 2021년 현재 인공지능기술은 미국이 44.6점, 중국 32점, EU 23점으로 미국이 선도

- 전세계 AI인재중 미국의 비중이 13.9%, 그뒤를 중국이 8.9%로 추격중

○ 양자컴퓨터

- 중장기산업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할 양자기술도 미중간 패권전쟁의 핵심기술임
- 양자정보기술 특허는 미국이 33%, 중국이 29%로 미국과 중국에 62% 출원.
- 양자컴퓨터, 센서는 미국이 우세하고, 양자암호통신은 중국이 우위 차지

5. 소결 및 시사점

- 미중기술패권경쟁 지속으로 한국의 상황은 더욱 복잡, 부정적영향 최소화 대응책 강구
- 미중패권경쟁 면밀히 주시, 국제질서의 변화와 재편움직임을 파악하여 국내 미칠 영향력에 대한 대비 필요
-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주도적 제정한 규범 및 표준을 동맹국들에게 준수토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
- 미국주도의 국제규범, 표준을 따를 경우, 중국의 보복가능성에대한 대응방안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호환 및 협력될 수 있는 가능성 지속적으로 모색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원천기술 확보 및 공급망 강화전략이 급선무
- 미국은 변화되는 통상환경을 반영한 WTO체제 개혁에 우방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 외국인조달업격화로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예상, 특히 철강 등 건축자재, 자동차, IT 제품 조달에 가장 큰영향 예상

참고문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4.9.), “미중기술패권 경쟁동향과 시사점”